

누리과정의 '진짜' 문제



정희정(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유아보육과 교수)

현재 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유아보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1925년 7월 21일,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한 재판이 열렸다. 원승이 재판으로 알려진 스콥스 재판(Scopes trial)은 센트럴 고등학교의 생물학 교사였던 25살 존 스콥스가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테네시 주 법률을 어기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한판 붙은 세기의 대결인 이 사건은 테네시 주의회가 그해 3월 "이 주의 모든 대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주의 공립학교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인간이 신성한 창조물임을 부인하는 이론을 가르치고, 인간이 하등동물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일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른바 '버틀러 법(Butler Act)'을 통과시키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당시 이 치열한 싸움은 창조론의 상처뿐인 승리로 끝이 났다. 이후 1968년 버틀러 법

은 폐지되었고, 1987년 미국 대법원은 "학교 교과과정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국엔 진화론의 승리가 되어버렸다.

유아교육의 정답으로 주어진 누리과정

기독교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 93년 전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진화론과의 대결에서 조롱거리가 된 창조론을 변호하거나 공교육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창조론을 안타까워해서가 아니다. 단지 1925년 기금을 지원받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했던 스콥스와 2018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누리과정'을 운영해야만 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선택의 여지없이 가르쳐야만 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 유아교사에게 스냅스 재판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 어떤 교육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교사들이 던져야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최소한 유아교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안에 이 모든 대답이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정부는 2011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 유아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5세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에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요인으로 지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 OECD 회원국들의 무상교육 보육 확대,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따른 국가 지원 강화 등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은 5세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정부는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 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3~5세 모든 유아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의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에 만 일부 금액을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국가가 강제한 교육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 박탈

비판적인 교육 사회학자들은 교육체제의 형성과 진화과정에서 자본이 학교를 직·간접으로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집단인 기존 자본가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육내용은 보편적 가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나 학교의 교육과정은 사회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통제하는 수단적 기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교육내용의 선정과 구성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은 가치중립적으로 선정된 내용이 아니며 특정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지식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지식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기본법 제2조를 토대로 '홍익인간 이념, 인격도약,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 민주 국가 발전,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라는 교육적 이념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누리과정이 국가수준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틀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는 국가 교육과정의 옷을 입는 순간 이 역시 특정집단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과정이 되어버린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든 내용을 국가가 결정해서 제공함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자율권은 의미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제공할수록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상실함 위험이 있다. 누리과정 또한 유아교육의 방향, 목적, 영역별 세부내용, 편성 및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 체계와 형식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열린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누리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즉, 누리과정의 현장운영이 유치원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퇴색시키고 교사 자율성을 침해해 교사를 교육과정의 사용자로 전락시켰으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획안 중심의 운영은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에 유아는 수동적인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고 기계적 방식으로 유아교육 현장을 재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였다.

기장 본질적인 문제는 가치중립을 강요하는 일방적 교육과정

사실 누리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원숭이 재판을 보며 ‘진짜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던진다. 그는 ‘다수결원칙’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시켰음을 비판하였는데 즉,



그 당시 창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들 다수의 힘을 그들의 아이들이 단지 진화론을 배우는 것을 막는 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신까지 막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진짜 문제'는 점차 누리과정 외에는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다른 어떤 교육과정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교사라면 가져야하는 근원적인 질문, 교육을 통하여 유아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 교사들도 이러한 질문을 피해 외부에서 제공된 교육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안식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굳이 빗대자면, '기독교 유아 교육과정'과 '누리과정'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과정에 의문을 가지거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서 세운 유아 교육기관에서 조차 누리과정이 운영될 뿐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편에서 생각해볼 때, 사실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들조차도 기독교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으며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진화론에 근거를 둔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특정집단이 정해놓은 가치, 태도, 행동양식 등을 형성시켜왔다. 교육은 중립적이라는 신화를 통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매우 생소하다. 결국 이후 기독교인 유아교사로서 정체성을 자각했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기독교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은 어디이며, 기독교

인 유아교사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열의를 보이지만 이는 곧 민원으로 좌절되는 실정이다.

기독교 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신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이제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안 없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르침의 소명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누리과정이라는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기독교인 유아교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권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쉽지 않지만,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윌터 리프만의 법칙이 획일화된 누리과정에 갇혀있는 기독교인 유아교사에게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